새로운 지역고용전략이 필요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최근 들어 고용전략 및 노동시장정책을 수립 · 집행하는 데 있어 지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최종 전달체계는 지역 단위이며 지역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는 구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전략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대도시 집중화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 간 격차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의 지역 간 격차 심화는 저출산 · 고령화라는 인구변동과 맞물려 지역소외를 넘어 지역쇠퇴로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부분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OECD(2011)가 제시한 지역고용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느 지역에나 성장 기회가 존재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기존의 지역고용전략은 글로벌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지역 간 대응능력 차이로 발생한 고용 격차와 차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의 재배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또한 전국적인 고용정책 목표와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정책의 전달체계도 중앙집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역 간 자원배분의 재조정보다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인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 및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새로운 지역고용전략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지역의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정책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지역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포괄하

는 발전 정책, ② 외생적 투자나 이전보다는 내생적인 자산에 집중하는 정책, ③ 약점보다는 기회 요인을 강조하는 정책 ④ 집단적이고 협상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정책 등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공간-장소에 기초한 정책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 내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OECD의 제안은 각국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는 지역고용전략의 구체적인 사례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 단위 고용전략의 모색은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다양한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에 실린 일본과 영국의 두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4년 지역고 용전략의 모색을 위해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을 정리한 것이다. 영국 사례는 지역숙 련전략에 대한 최근의 접근과 실행 정책을 다루고 있다.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며, 이런 점에서 지역숙련전략은 지역고용전략의 성 과를 위한 핵심요소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영국의 숙련정책 변화 과정을 소개하고 분권화에 따라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 숙련정책을 둘러싼 지방분권화 절차가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필드 시의 사례를 통해 지역 숙련전략의 모색에 대해 고민하고 숙련정책 관련 도전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일본 사례는 인구변동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앞선 경험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방권의 쇠퇴 현상을 촉진시키고 있는 일본의 현상은 우리에게도 예측 가능한 미래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지역별 고용창출 성공 사례를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통해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역고용전략 수립뿐만 아니라이와 관련한 연구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역'을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은 논의나 실행전략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고용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숙련전략이나 지역일자리 창출전략, 고용정책의 전달체계, 지역고용 거버넌스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

(LOBAL COCUS

를 찾아가야 하지만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나 격차 해소를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공유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실행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